

PL법 시행, 소비자 주권 확보 시대 개막

중기, 협력업체와 공동 연계 체계 구축 필요

임영주 / 한국PL센터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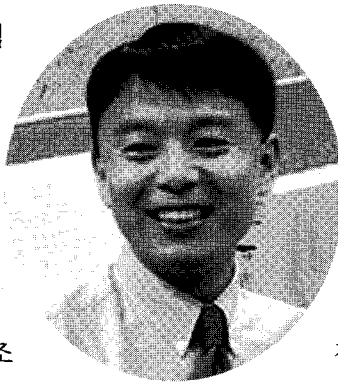
이는 7월 1일,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제조업체들은 PL관련 대응책 세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한국PL센터는 기업의 종합적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의 일환으로 제조물책임 문제를 글로벌한 시점에서 연구·파악하고, 그 성과를 폭넓게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설립돼 제품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연수, 출판, 연구 용역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PL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각 업체에게 자문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PL센터 임영주 소장을 만나 PL법 시행에 따른 견해를 들어보았다.

한국PL센터 전 부문에 걸친 사업의 개발과 제휴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임영주 소장은 일본이 PL법을 시행했던 지난 1995년 컨설팅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PL에 관심을 갖게 됐다.

PL법의 도입은 해당 국가의 소비자 의식



수준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것이므로 국내의 경우 소비자의 기대 수준과는 동떨어지게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PL법 시행이 많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는 PL법에 대해 “소비자 주권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국PL센터는 국내에서 PL법이 통과되기 전인 1999년 3월부터 PL에 대비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왔다. 따라서 당시에는 미진한 자료와 부족한 전문지식으로 일을 꾸려나가야 했고 자문을 구할 곳도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찾아서 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 소장은 “PL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기업들에게 봉사와 홍보를 동시에 한다는 생각으로 무료 자문 및 교육을 비롯해 해외 자료까지 제공했던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임영주 소장은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PL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회원수가 6,000명에 달하는 것을 볼 때마다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

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 임영주 소장은 “기업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는데 급급한 PL관련 타 단체들과 달리 한국PL센터는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업과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현재 임 소장은 LG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와 한국PL센터가 공동으로 맺은 제휴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PL보험 가입시 할인율을 적용해 주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과 진단, 컨설팅 등을 해주는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는 “제품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안전경영대상’이란 시상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업종별 컨설팅 및 교육의 전문화’를 올해의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20여명 정도의 신규채용을 통해 종합 리스크 매니지먼트 전문 컨설팅사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PL법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국내 매스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대책 미비와 소비자들의 PL법 인식 부족을 가장 큰 문제거리로 꼽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 인력, 시간의 부족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당장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전국순회설명회 및 관련 교육의 일부 지원 등 PL대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PL단체 보험까지 할인 해

주고 있다.

임 소장은 “기업을 실제 현장에서 대하다 보면 법리적인 이해 및 전사적 대응체제 구축 등에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이는 정부 차원의 사전 준비 및 홍보의 부족에 원인이 온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기업처럼 부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품질관련 부서를 활용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L법은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즉, ‘소비자를 위한 법’임에도 정작 소비자들은 PL법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다.

임영주 소장은 “외국의 경우 PL법 시행 이전에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소비자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내놓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모든 제품이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제품 사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해당 제품의 소비자 창구를 통해 상담을 하거나 PL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소비자들의 자기권리 찾기’를 강조했다.

“기업과 소비자 양대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진정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자리잡을 수 없다”는 임영주 소장 과 한국PL센터가 설립 초기의 취지대로 국내 PL법이 올바르게 정착하는 그날까지 업계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ko]

박초혜 기자